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사본

국무총리 지시 제 26 호

(70-2012)

1975. 12. 19.

수신 :

제목 : 대단위 해운사업의 추진에 관한 지시

수출증대와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따라 급증하는 수출입화물의 정기 안정수송과 국적선에 의한 적취율 제고를 위하여 1981년 까지 외항선 500만톤의 증강을 목표로 외항해운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대한해운공사와 범양전용선주식회사를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단위회사로 중점육성하고자 화물수송권의 우선확보 및 적정운임의 보장, 외항선의 도입이나 국내건조시의 소요내외자에 대한 용자 및 지불보증의 특혜인정등 제반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던 바, 이러한 세부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사항을 지시하니 관계부처는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단위 해운회사의 수송권 확보에 대하여

가. 제철원료, 비료원료, 원유, 양곡등 정부가 지정하는 중요수입 물자에 있어, 수입물자의 싹수요자인 제철회사, 비료회사, 석유회사 등은 반드시 국적선이 수송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원료구매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1975. 12. 19.

나. 합작투자 및 착관유치를 위하여서나, 원료확보 방법상 부득이 하거나, 국적선 미보유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선이 수송권을 갖게되는 원료구매 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대단위 해운회사와 일반해운회사와의 수송권 경합에 관하여

가. 외항해운 육성방침상에 대단위 해운회사가 확보토록 되어있는 주요 수입물자의 수송권에 대하여는 대단위 해운회사가 일반 해운 회사에 우선하여 수송권을 확보토록 한다.

나. 다만, 대단위해운회사에 확보되어야 할 수송권중 그 일부가 이미 일반해운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기득권으로 인정토록 하며, 금후 수송량의 증가나 선적지등의 변경에 따라 기득권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대단위 해운회사가 수송권을 확보한 후 선평증강시 까지 발생하는 잉여 수송량에 대하여

잉여 수송량에 대하여는 외국 해운회사에 우선하여 국내 일반해운회사가 수송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국내 일반 해운회사가 수송에 참여할수 있는 충분한 기간의 예고 및 수송조건등을 제시하도록 하며, 운임등 수송조건은 대단위 해운회사와 동일하게 한다.

국무총리 지시 제 호

1975. 12. 19.

## 4. 적정운임 보장에 대하여

가. 대단위 해운회사인 선주와 주요수입물자의 수요자인 하주간의 수송계약은 취항하는 선박의 선령이 종료되는 시기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도록 하며, 운임의 조정은 매 2 - 3년마다 쌍방합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나. 운임의 조정은 국제운임 시황에 따라 경쟁운임으로 책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적선의 운임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운임이 보장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 5. 대단위 해운회사의 선박확보에 대하여

대단위 해운회사는 수송권 확보 및 적정운임 보장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매입 또는 국적취득 조건부 낙찰선 방법등에 의하여 확보함에 있어서, 수송계약 체결상 기본사항이 되는 선형, 선가, 자금조건등에 관하여 하주, 선주 및 정부가 합의하여 사전에 제시된 선박확보 조건에 (국제시황에 따라 수시 조정가능) 적합한 선박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선주 임의로 선박을 확보한 연후에 발생하는 수송계약 체결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한다.

6. 대단위 해운회사의 선박 국내건조에 대하여

대단위 해운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선박을 국내건조케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국민투자자금 운용규정등 관계규정을 선박건조에도 적합하도록 개정, 보완토록 하며,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는 건조선박을 후취담보로 취득케 한다.

7. 대단위 해운사업의 정책조정에 대하여

대단위 해운사업의 집행상 예상되는 다음사항에 관한 정부내외 협정은 관계부처가 합외하여 시행한다.

가. 대단위 해운회사가 수송을 담당하여야 할 중요수입물자의 지정

나. 외국선이 수송을 담당하는 원료구 매계약 체결의 승인

다. 중요수입물자의 수송에 관련된 국내 일반해운회사의 기득권외 조정

라. 적정운임 결정

마. 선박확보조건의 협의

국무총리 지시 제 호

1975. 12. 19.

바. 대단위 해운회사의 선박국 내건조 지원

사. 기타 대단위 해운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끝.

국 무 총 리